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1호 소개

□ 최신 세계헌법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공산당의 총선을 위한 정당의 지위 인정소원>은 제20대 연방의회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는 정당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단체'로서 그 '자금의 출처와 지출, 재산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단체의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독일 공산당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총선에 후보자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보안처분 중인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에 대한 헌법소원>은 병원에서 보안처분 집행을 받던 환자가 치료거부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치료를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치료거부 결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우선하므로 이러한 경우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불가침권, 일반적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치료거부의 효력은 자기 자신의 권리에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고,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과 관련된 부분에는 여전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자선단체 기부자 정보제공 요구의 위헌성>은 기부금을 모집하며 세금을 감면받는 자선단체로 하여금 주요 기부자에 관한 정보를 주정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기부자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면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므로 자선단체 기부자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중대한 부담은 공익 달성을 위해 세밀하게 고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정보제공 요구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보건위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는 보건패스 적용확대, 의료인력 백신접종 의무화, 양성진단 피검사자에 대한 10일의 격리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규범통제를 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위기상황에서 입법부의 재량을 강조하며 보건패스 관련 조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으나, ① 보건패스 미소지 피용자의 고용계약 조기종료에 관한 조항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이유로, ② 10일 격리의무 조항은 검사결과 양성확인자에 대한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개별적 판단 없이, 검사 실행시 모든 피검사자에게 전달된 일반적 정보만으로 격리의무가 자동 발생됨을 이유로 각각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벨기에 헌법재판소의 <신분증 지문등록에 대한 해석유보부 합헌결정>은 12세 이상 국민의 두 손가락(왼손과 오른손 검지)의 지문을 채취하고 그 이미지를 디지털화하여 신분증에 저장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채취된 지문은 행정청에 의해 전자적 방식으로만 읽힐 수 있고 신분증에만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점, 그 최대 보존기간 및 접근권한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생활 존중권과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지문의 디지털 이미지는 저장될 수 없고, 접근권한을 가지는 기관들도 법률에 따라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는 해석 하에 합헌이라며 해석유보

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경합> 사건은 신청인의 아들이자 가톨릭 신부였던 망인의 생전 아동 성추행 관련 기사 보도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문사의 표현의 자유와 보도대상자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형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 사건에서 망인이 대중에 알려진 정도, 기사의 보도 시기, 기사내용의 표현방식이나 정보원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중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징벌의 사법심사 대상성>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건입니다. 최고재판소는 기존에 이른바 '부분 사회의 법리' 등을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1960. 10. 19. 판결), 최근 판결에서는 소속 의원 징계에 관한 지방의회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주민자치원칙과 출석정지처분으로 인한 의정활동 제약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의약품 인터넷 판매 규제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는 일정한 의약품('요지도의약품')의 대면판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최고재판소는, 문제된 조항이 특정한 범위의 의약품만을 한정하여 요지도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의약품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입법부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이집트 헌법재판소와 터키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기관들은 기존에 소개된 적이 있으나, 그간의 헌법 개정 또는 주요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다시 소개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미국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여성의 낙태권과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헌법적 논의>에서는 최근 다시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낙태 관련 논의를 소개하였습니다.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의 Roe v. Wade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여러 주에서 선례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텍사스주에서는 임신 6주 이후 낙태하는 사람 및 그 조력자에 대하여 일반 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서 이긴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의 '심장박동법'이 시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위 심장박동법 및 유사한 내용의 다른 주 법률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이므로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멕시코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멕시코 헌법 제2조 개정에 관한 논의>는 멕시코를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규정한 헌법 제2조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 멕시코 헌법에서는 '원주민들에 기반한 다문화국가'를 강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사는 흑인(아프로멕시칸)들은 '원주민'에서 배제됨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멕시코가 아프로멕시칸 공동체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이 규정이 실제

로 의미를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인종간 차별이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